

월요광장



김형중
조선대 국어국문학부 교수
인문도시광주위원회 위원장

2025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의 변론이었다. 변론 말미 이례적이게도 그는 노래 가사 한 구절을 인용한다.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 그 곡인데 인용한 부분은 이랬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어 장 변호사는 자신의 말을 덧붙인다.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루말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국민이 법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법의 언어가 일상어가 되어가고 있던 판국에 그가 구사한 언어는 각별했다. 혹자는 탄핵 정국에서 가장 ‘문학적’인 언어였다고 극찬하기까지 했다. 분명 인용한 가사는 당시 대부분의 국민에게 일관되게 퍼져 있던 어떤 정서 상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었다. “내란 이전의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풍경”. 그러나 비판철학자 아도르노의 사도이기도 한 나로서는 저 아름다운 가사에 동의하기 힘들었는데, 대체로 아름다운 것들은 거짓말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황당한 비상계엄 이전 우리가 살아오던 일상은 정말 평온했던가? 오염되지 않은 말들의 세계였던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서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평온’했다고 가정하는, 혹은 그렇게 상상하는 대한민국 헌정사는 항상 팍팍했고 폭력적이었고 요란했다. 즉 평온하지 않았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어떤 아름다운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상실’한 어떤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약속이 지켜지며 일상은 평온한 어떤 이상적인 국가 상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태가 이전에 존재했고 우리는 한 때 그것을 누리 적이었으나 어떤 이유인가 지금은 상실해 버려서 되찾아야만 한다고 가정해야 한다. 실은 헌법의 작동 메커니즘도 거기서 멀지 않다. 11조 3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든가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문장이 특히 그러한데, 알다시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했던 적은 헌정 이래 한 번도 없었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적도 물론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민주주의는 항상 그리고 영원히 ‘부족한’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다. 그러나 저 문장들은 실현되어야 할 그 가치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화함으로써 법을 정립하고 국가를 정초한다. 그러니까 수행적 발화를 사실 발화로 바꾸어 놓은 헌법도 거짓말하는 셈이다.

역설적이지만 바로 그 이유로 헌법은 지켜져야 한다. 너무나 연약한 허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인데, 그럴 수록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로 여겨져야 하고, 그 믿음은 모든 국민이 공유해야만 한다. 몇 사람의 광기가 그 믿음의 지반을 흔들기 시작하면 헌법은 금방 그 연합함을 드러내고 만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나, ‘국민 저항권’ 운운이 그 증거다. 장순욱 변

호사 역시 바로 그 믿음 위에서 그렇게 말했을 줄 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는다.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에 대한 향수라는 점에서만 아니라 자꾸 플라톤의 살벌한 이상 국가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바로 저 가사와 그다지 다를 바 없는 상태를 국가에 적용한 바 있다. ‘모두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제 기능을 다하는 나라’. 그러니까 “철인은 지혜로 통치하고, 군인은 용기로 싸우며, 생산자는 절제로 노동하는” 나라, 그것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이다. 이것은 일종의 카스트 제도일 텐데, 그래서 저 아름다운 노래 가사 속에 숨겨진 이데올로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보수주의자의 그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민주주의는 항상 ‘부족한’ 어떤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가기보다는 계속 한 발 더 이동해야 한다. 가령 작년 12월 11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탄핵 집회에서 스스로를 “저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소위 말하는 솔집 여자입니다”라고 소개하며 발언을 이어 나갔던 김유진 씨가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런 민주주의다. 그의 말을 옮긴다.

“서울 지하철도는 여전히 장애인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여성들을 향한데이트 폭력,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이주 노동자의 아이들이 받는 차별이, 그리고 전라도를 향한 지역 혐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는 데 성공 하더라도, 이것이 끝이고, 해결이고, 완성이라고 여기지 말아주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두 발 뻗고 잠자리에 들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필의 향기



이중섭
소설가

좀처럼 입맛이 돌지 않았다. 수술 후 두 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불편하다. 전날 주치의는 경과가 좋으며 조직검사에서 암 증상은 보이지 않고, 최장내 유두상 점액종은 생각보다 중간 정도고, 개복하니 췌장이 조금 깨끗하지 않아 예상보다 절제를 많이 했다고 했다.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췌장은 마치 아귀 내장처럼 보였다. 그나마 남은 입맛이 썩 사라졌다. 빠진 몸무게는 석 달쯤 지나면 회복되니 자주 걸으라며 다음 진료를 석 달 후로 잡았다.

아침 다섯 시쯤 일어나 집 근처 하천을 걷는다. 공기가 서늘하다. 산책길 옆 화단에는 키 작은 청보리가 심겨 있고, 셋노란 애기풍뎡충, 무릎 높이의 접시꽃 그리고 하천 위 양 도로 옆으로 붉은 장미가 넘칠 처이다. 그렇지, 아직은 장미의 계절이지. 내 몸의 움직임과 다르게 여전히 자연의 현상에 마음이 놓인다. 조금 더 걸으니 물속에 왜가리와 백로가 보인다. 어린 새끼를 거느린 두 무리의 야생오리 가족도 먹이를 찾아서 부지런히 움직인다. 다람쥐 무늬의 새끼 오리들이 다리 밑 웅덩이에서 생업에 충실하다.

다리 난간에는 대선용 플래카드가 요란하게 달려 있다. 낮이면 들리던 확성기 소리, 텔레비전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양 진영의 목소리가 징그럽다. 이쯤에서 발

장미꽃이 진 후에 여름이 온다

길을 돌려야 한다. 하지만 마음도 몸도 계속 걸어도 편찮다고 속삭인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 걷고 싶은 마음도 그것을 부추긴다.

수술을 끝내고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전정터의 부상 병동 같았다. 간호사들은 메디컬 카트를 끌며 끊임없이 딸그락거렸다. 의료기구들이 부딪히는 소리, 이것저것 환자의 상태를 묻는 소리, 약을 쓰는 환자의 목소리들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마취에서 막 풀린 몸 상태인데 주위가 너무 산만하니 몸과 정신이 분리된 듯 혼란스러웠다.

몸에 장착한 장치들은 마치 전정터에서 진자를 구축해 놓은 것 같았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약물을 투여하려고 만든 보급로 같았다. 왼쪽 팔에는 입구가 두 개로 갈라진 중심 정맥관, 배꼽 오른쪽에도 두 개의 튜브관, 그 아래 요도에도 한 줄의 튜브가 설치되었다. 수액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혈액으로 나오는 찌꺼기와 오줌을 끊임없이 받아냈다. 주령주령 달린 장치들 때문에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었다. 오줌통을 가장 자주 비워야 했다. 침대 옆에 수액 걸이 폴대에서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했다. 게다가 수술 부위를 보호하려 복대를 차니 더 답답했다.

전철역을 지나 하류로 내려갈수록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물이 많다. 갑자기 하천가에 진한 초록의 셋노란꽃이 무더기로 피어 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검색해 본다. 노랑꽃장포다. 근래에 노랑꽃이 이렇게 신선하게 보인 적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반갑다. 물 많은 하천에 노랑꽃장포가 다복하고, 하천 위 도로 양옆으로 당굴장미가 피어 있다. 이것은 분홍 장미꽃이다. 야기 손보다 더 작은 꽃들이 반갑게 손을 흔든다.

‘6·3 선거 공감’ 기고 <6>



강정희
전 교사·소설가

지난겨울부터 내가 국민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자각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나는 나만의 개성과 취향을 가진 개인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인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대선 본 투표일이 목전이다. 후보들이 거꾸러지며 현수막에 이름을 내걸고, 광장에 나와 군중 앞에서 소리 높여 유세한다. 두 손을 높이 쳐들고 ‘국민 여러분!’ 이라고 애타게 부르며 자신의 정책과 약속을 외친다. 국민의 뜻을 받을겠다고 무릎을 굽혀 바닥에 엎드려 큰절하며 호소한다.

나는 유권자 4439만 1871명 중 한 명이다. 1/n 의의 한 표를 갖는다. 나의 한 표, 나를 위한 한 표다. 내가 바라는 후보에게 10표나 20표를 던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모든 이가 소중하기에 공정하게 한 표씩이다. 물방울이 모여 호수와 바다를 이루듯, 모래 한알 한알이 모여 해변 백사장을 이루듯

호모 폴리틱쿠스(Homo politicus)의 권리

모두 단 한 표씩이다. 한 표가 하찮아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

인간(人間)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라는 의미다. 두 사람이 만나면 이미 사회 정치적 관계가 지어지는 것이다. 요즘엔 홀로 방 안에 앉아있더라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디어와 네트워크 안에서 사회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은 호모 폴리틱쿠스(Homo politicus)다. 인간은 모두 정치적 존재다.

어떻게 얻은 1인 1 참정권인가.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귀족(시민) 남자만이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 시대가 있었다. 지금은 민주주의, 오늘 나에게 나라의 주인으로서 투표권이 있기에 민주주의다. 많은 인력과 예산과 물자와 시간을 들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진행한다.

투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진행된다. 다수가 늘 절대적으로 옳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현재는 그것이 최선이기에, (미래 어느 날엔가 더 완벽한 제도가 발명될지도 모른다.) 피선거권을 가진 우리는 우리 삶을 좌우하는 정치에 관해 최소한의 공부를 하고, 최고의 대표를 선출(해야)한다. 과거 그러하지 못한 아쉬운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이 높은 수준의 지식과 많은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매 순간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투표로 선택한 그는 합리적 행정 능력과 인문

소양을 갖춘 사람이면 좋겠다. 우리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알고, 얼마간의 유머와 낙관적인 웃음을 가진 사람이면 더 좋겠다. 이제 5년 동안 우리를 대표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인과 협의하여 일하고 책임을 질 일은 책임을 질 것이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소외된 이가 없게 살릴 것이다. 그에게 국가 행정을 맡기고 우리는 마음 놓고 우리 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또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몇 해 전, 역시나 굵이굵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대선투표를 하고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주변 지인들의 반응을 기억한다. ‘나 이제 더 선하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축축하게 젖은 목소리로 서로 축하하며 감동을 나누었다. 투표는 그런 것이었다. 나를 위한 일이고, 민주주의를 위한 한 걸음 실천이고, 한 표의 감동이고, 삶인 것이다.

평소 소원했던 지인 친족 친구들과 투표를 안부 삼아 묻는다. 의견이 다를지라도 나라를 위한 마음만 같다면 길게 토론할 수 있다. 생애 첫 투표를 하는 젊은 이들을 축복한다. 앞으로 오는 선거마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막중한 의식을 가지고 한 표를 던지자. 6월 3일, 허리 아프다고 망설이는 친정엄마를 부축하여 투표 나들이를 약속했다. 가로서 길이 초목빛으로 환하게 쫓아 올라.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지 모르니 모자와 양산도 챙겨야겠다.

社說

역대급 호남 사전투표를 본투표로 이어가야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남 56.5%, 전북 53.01%, 광주 52.12%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34.74%)보다 20% 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로 17개 시도 가운데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이전 20대 대선 사전투표율(광주 48.27%, 전남 51.45%)에 비해서도 5% 포인트 정도 상승한 역대 최고치다.

사전투표가 시작되자마자 투표소마다 긴 줄이 이어졌고 100세 넘는 고령자도 소중환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줄을 서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호남의 사전투표율은 대구·경북 등 영남권에 비해 많게는 두 배 가량 높았는데 이는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내란 종식·정권 심판’에 호응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조기대선인 만큼 정책도 중요하지만 내란 세력 심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대·도립대 통합…4·2년제 성공 모델 기대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의 통합이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통합 대학이 국립목포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한다.

대학 본부는 목포대가 있는 무안 도립 캠퍼스에 두고 전남도립대가 있는 담양에는 글로벌캠퍼스를 운영한다. 두 대학의 통합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시도되는 4년제와 2년제 교육 과정의 통합 운영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단순한 대학간 통합을 넘어 실무 중심의 전문대 교육과 연구 중심의 4년제 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고등교육 패러다임을 연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두 대학의 통합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고사 직전인 지방대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존을 모색한 결과다.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시작해 담양캠퍼스 특성화 전략과 학사제도·행정

호남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박수를 보낼 만하다. 하지만 높은 사전투표율이 반드시 최종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보수 세력은 이전부터 부정선거론을 거론하며 사전투표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들이 3일 본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몇몇 관리 부실은 보수 세력 유권자들의 낮은 사전투표 참여의 한 원인일 수도 있다.

장갑을 벗을 때까지는 게임이 끝난 게 아닌 것처럼 선거도 본투표가 끝나야 최종 투표율이 집계된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호남 유권자들은 본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내란 종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을 교훈 삼아 본투표에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로 흑자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선거 주장에 발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조직 개편, 전문학사·학사 연계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통합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구성원 의견 수렴과 설명회, 교육부의 7차례에 걸친 심사위원회를 거쳐 통합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통합 후의 운영 전략을 꼼꼼하게 준비했다.

민간의 준비를 거쳐 교육부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통합 운영 과정에서 갈등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는 잘 운영한다면 각자의 특성을 살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삐걱될 경우 오히려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내년 3월 공식 출범 전까지 소프트 랜딩을 위한 민간의 준비를 해야 한다.

통합 국립목포대는 국내 최초로 4년제와 2년제를 하나의 대학 안에서 통합 운영하는 만큼 새로운 고등 교육의 성공 모델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無等鼓

부재자 투표는 1957년 자유당 시절 ‘선거별 개정안’에 처음 등장했다. 군인과 군무원 등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1960년 6월 ‘국내 부재자투표’ 제도를 명문화한 국회의원 선거법이 제정됐다. 부재자투표 신청 대상을 장기여행자, 군인, 병원·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등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 반영됐으나 결과는 역시 실패였다. 신고 요건(신분상의 요건)이 폐지되었을 뿐 사전신고라는 번거로운 절차가 남아있었고 투표시간이 여전히 짧았다. 부재자 투표소도 전국 400여개

에 불과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누구나 원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현행 사전 투표제는 2012년 2월 29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부터 적용됐다. 본 선거 전에 시행하는 사전 투표제는 완벽하지 않다. 법학자들은 ‘주권은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정보를 접한 국민이 행사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헌법 원칙을 위배한 제도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사전 투표 후에 후보가 사퇴하거나 단일화할 경우 사표가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주장과, 확대하면 오히려 부정이 줄어들 것이 라는 찬반론이 팽팽했다. 막상 제도를 시행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전 투표에 대한 공정한 관리다. 제21대 대선 사전 투표 첫 날인 지난

자 투표 절차가 복잡하고 유권자가 정해진 시간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본 선거일에도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투표율이 3%~4%에 그쳤다.

2005년 3월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부재자 투표 제한 요건을 폐지하고 누구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 반영됐으나 결과는 역시 실패였다. 신고 요건(신분상의 요건)이 폐지되었을 뿐 사전신고라는 번거로운 절차가 남아있었고 투표시간이 여전히 짧았다. 부재자 투표소도 전국 400여개

2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일어났다. 선거관리인이 투표용지를 배부한 선거인들을 투표소 밖에 대기시키고 일부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들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오기도 했다. 선거사무원이 배부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이번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전 사과 멘트를 듣는 것조차 힘들다.

/운영기 정치·경제담당 에디터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